

공동 2014-17-07

정부학자금의 효과적 지원을 위한  
이중지원 방지사업 운영방안 연구

Improvement Plan for Preventing Duplicate Payments  
in College Student Financial Aid

2015. 4.





공동 2014-17-07

# 정부학자금의 효과적 지원을 위한 이중지원 방지사업 운영방안 연구

Improvement Plan for Preventing Duplicate Payments  
in College Student Financial Aid

연구책임자 : 남수경(강원대학교)

공동연구원 : 엄문영(한국교육개발원)

홍성두(서울교육대학교)

연구보조원 : 김태영(강원대 박사과정)



# 제 출 문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정부학자금의 효과적 지원을 위한 이중 지원 방지사업 운영방안 연구』의 연구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 4

- 주관연구기관명 :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 구 기 간 : 2014. 11. 28. ~ 2015. 4. 27.
- 주관연구책임자 : 남 수 경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정책연구과제 연구팀의 의견이며 한국장학재단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연구 요약

이 연구는 학자금 지원을 위해 투입되는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기관의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사업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학자금 이중지원자 전체에 대한 특성 분석, 대학의 장학업무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미국과 영국 등 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 관련 사례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먼저 2011~2013년의 3년간 학자금 이중지원자 27,825명의 개인 및 대학 배경 변수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여기서 ‘학자금 이중지원자’란, 동일 학기에 한 학생이 학자금대출과 장학금 등을 통해서 지원받은 금액이 등록금 범위(2011년과 2012년은 등록금+50만원, 2013년부터는 등록금+10만원)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자를 의미한다.

학자금 이중지원자의 개인배경을 분석한 결과, 가계소득분위별로는 1분위와 2분위가 절반 가까이 되었는데, 이중지원 금액을 보면 1분위와 2분위 다음으로 9분위와 10분위가 많았다. 이중지원자의 학적별로는 졸업생이 과반수를 넘었다. 다음으로 학자금 이중지원자의 대학배경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4년제 대학이 전문대학에 비해 약 2배 정도 많았으며, 대학규모별로는 4년제 대학의 경우 중규모 대학(재학생 5천명이상~1만명미만)이, 전문대학의 경우 대규모 대학(재학생 4천명 이상)에서 학자금 이중지원자가 많았다.

이중지원자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중지원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사립 중규모 4년제 대학과 사립 대규모 전문대학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이중지원자의 절반 이상이 졸업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졸업생에 대한 출구 관리를 강화하되 졸업생들의 이중지원 금액 반환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대학별로 시행되고 있는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사업의 운영 현황에 대

한 실태 및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하여 대학의 장학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최종적으로 233부 분석) 결과를 분석하였다.

장학업무 담당자들은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사업의 추진 목적으로 ‘학자금 지원에 대한 수혜 학생간의 형평성 제고’를 선택한 비율이 ‘정부 학자금 지원예산의 효율적 활용’보다 높았다. 그러나 담당자의 경력이 낮을수록 업무처리 기준에 대한 숙지도가 낮아서 담당자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지원 초과허용액(현재 10만원)에 대해서는 50만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중지원 허용범위 개선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특성으로는 현행대로 학생특성 관계없이 동일 금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사업의 대상사업 범위에 대해서는 지자체나 공공기관 장학금만 이중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중지원 방지사업 적극 참여대학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방안과 관련해서는 부적 패널티보다는 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그리고 인센티브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II유형이나 국가근로장학사업의 대학별 배정액을 확대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미국, 영국 등 해외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사업 운영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제도 개선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범정부 차원의 사전심사 및 관리를 위한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IT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매칭(data-matching)’을 포함하여 정부부처간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정부부처나 기관간의 정보 교류 및 수혜자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한다. 둘째, 학자금지원 조직 내에 위험관리 전담 조직의 운영, 전문가 고용 및 행정관리력 개선 등을 실행해야 한다. 셋째, 사전교육을 통한 책임문화 확산과 사후관리에 대한 부적 처벌 강화를 적극적으로 홍보 및 실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학자금지원 초과수급 방지 및 한도액에 대한 법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대학에 대한 반환 책임을 강화하고 전자납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상의 분석 및 검토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근거 법령의 정비를 통해 사업 운영의 정통성과 안정성 확보

재단법을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사업의 기본법으로 설정, ICL 특별법은 재단법을 준용, 현행 재단법의 보칙(補則) 내 한 개의 조항을 절 수준으로 격상하여 아래와 같은 기본 내용을 신설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첫째, [사전예방 조항]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 개념, 사업 참여기관 명시, 학자금 지급정보 등록 및 이중지원 사전심사 의무, 대학의 이중지원 방지를 위한 교육 강화 등을 포함한다. 둘째, [사후해소 조항] 이중지원 해소를 위한 의무 주체 명시, 유형별 해소방안 마련, 대학 및 외부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포함한다. 셋째, [사전 및 사후조치에 대한 강제 및 벌칙, 권리구제 조항] 이중지원 미해소 장학금을 대출로 전환, 대학의 의무 불이행 시 재단 학자금 지원 축소, 대학 및 학생의 권리구제 조항 신설 등을 포함한다.

◆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 프로세스 체계화

첫째, 지급정보 등록 및 수정단계에서는 사전 심사를 실질화하고 이를 통해 최대한 이중지원자를 선별하도록 한다. 제한 조치 위주보다는 인센티브 제공 중심의 참여 유도방안을 마련한다. 대학 행정인력의 증원을 전제로 외부기관의 재단 시스템 등록 의무를 대신해 대학에 학생의 장학 정보를 제공하여 대학이 해당 학생의 학자금 지원 정보를 등록하게 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둘째, 사전심사 단계에서는 공공기관의 참여율 향상과 외부 기관과의 지급정보 공유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참여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학자금 지원정보를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기한까지 등록하게 하며, 기관에서 학자금을 지급하기 전에 반드시 이중지원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시스템상으로 대출상환 대상자의 이중지원 금액에 대한 확인에 어려움이 있으며, 졸업생의 이중지원 해소 방안이 전무한 상태이다. 이를 위해 대학의 1차적 해소의무 규정 신설 및 학생의 연락처 정보 업데이트 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이중지원 미해소 졸업생의 경우 가산금리 적용 및 초과금액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먼저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신청단계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집중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므로 이 단계의 교육을 강화한다. 이중지원 방지사업 관련 전문 상담원 확보를 통해 전문적이고 만족스러운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대 학담당자 대상 온라인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대학의 많은 경우 저경력자가 장학업무를 맡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일회적인 사업설명회보다는 일정시간의 직 무연수를 통해 업무에 대한 숙지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별로 홈페이지 상에서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사업을 안내하고 졸업생 대상 출구교육을 강화하도록 제도를 강화한다.

◆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사업 운영 조직의 재구조화

먼저 교육부에 (가칭)학자금지원시스템 선진화팀을 둬으로써 정부 학자금지원 예산의 합리적 배분과 성과관리 방안을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다음으로 한국장학재단의 경우 학자금 이중지원 담당인력을 보강하고, 학자금 이중지원 관리조직으로서 재단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면서, 점차 재단 내 독립조직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재단 내 별도의 조직 구성(인력 배치, 재정 지원 등), 정부·공공기관·지자체·비영리 재단·대학·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범기관적 협의체 신설 등 이중지원 방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직 차원의 방안 제시가 요구된다. 따라서, 현행 재단 내 ‘학자금지원부 내 학자금통합지원팀’, ‘국가장학지원부 내 대학현장관리팀’, ‘학자금금융연구소 내 금융리스크팀’을 통합하여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사업 전반에 대해 관리하도록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가칭)위험관리부를 별도로 설치하되, 하위에 4개의 팀, 즉 기획 및 대외협력팀, 장학금 및 대출 수정수급관리팀, 장학금 및 대출 이중지원 관리팀, 금융리스크 관리팀으로 구성할 수 있다.